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8차포럼】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플랫폼 규제 : 각 국의 대응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목 차

- ▶ 유럽연합
 - ▶ 프랑스
 - ▶ 독일
 - ▶ 이탈리아
 - ▶ 스페인
- ▶ 호주
- ▶ 캐나다
- ▶ 미국

유럽연합

EU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 ▶ 2019.3.20,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 가결
 - ▶ 2019.6.7 시행. 회원국은 2년 이내에 국내법에 반영해야 함.
- ▶ 저작권지침 제15조, 온라인 이용과 관련한 언론출판물 보호 (초안에서는 11조)
 - ▶ 언론출판물발행인에게 기사에 대한 저작권접권 부여
 - ▶ 구글, 페이스북 등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의 기사 이용과 관련하여 언론출판물발행인의 법적 보호 강화
- ▶ 플랫폼 기업 뿐만 아니라 인권단체들도 제15조 및 제17조(업로드 필터 관련)에 반대



(출처 : ZUNICLAW, Copyright or Copywong? The EU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2019.4.8.)

EU 저작권지침

제15조 주요 내용

- ▶ 권리 대상
 - ▶ 언론출판물
 - ▶ 신문, 잡지와 같이 단일 제호로 주기적,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개별 아이템으로 구성됨
 - ▶ 뉴스 또는 다른 주제 관련 정보를 일반 공중에서 제공할 목적
 - ▶ 서비스제공자의 편집 책임 및 통제 하에 미디어의 형태로 발행되는 것
 - ▶ 잡지, 뉴스 웹사이트도 포함. 어문저작물 이외에 사진, 비디오물 포함
 - ▶ 과학 또는 학문적인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출판물, 블로그와 같은 웹사이트는 포함하지 않음
- ▶ 권리 내용 : 언론출판물을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으로 이용할 경우 언론출판물 발행인에게 복제권, 공중이용제공권 부여
- ▶ 보호기간 : 언론출판물이 발행된 후 2년

EU 저작권지침

제15조 주요 내용

- ▶ 면책 대상
 - ▶ 사용자가 언론출판물을 사적으로 또는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 하이퍼링크
 - ▶ 개별적 단어의 이용 또는 언론출판물을 매우 짧게 발췌하는 행위
- ▶ 저작자의 수익분배청구권
 - ▶ 저자는 언론출판물발행인이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받는 수익의 적절한 분배 요구 권리가 있음

프랑스

- ▶ ‘뉴스통신사 및 언론출판사를 위한 저작권접권 신설을 위한 2019년 7월 24일 법’ 신설. 2019년 10월 말 시행
 - ▶ 언론출판물 사용료에 대한 설명 추가
 - ▶ 통신사 및 언론출판사의 인적, 물적 그리고 재정적 투자뿐 아니라 정치 및 일반 정보에 대한 기여 고려 요구
 - ▶ 해당 뉴스 이용을 통해 직접, 간접으로 얻은 수익 모두에 기반하여 산출
 - ▶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 수익 분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 언론사, 기자 대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도록 함.
 - ▶ 서비스 제공자는 뉴스 기사 이용 관련 모든 정보와 사용료에 대한 투명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 제공 의무
- ▶ 구글의 반발, 기사를 보여주는 방식을 제목과 링크만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

프랑스

- ▶ 2020.4.9. 프랑스 경쟁당국, 구글(Google)에 뉴스 재사용에 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임시조치 부과
 - ▶ 3개월 이내에 언론계와 뉴스 재사용에 관한 사용료를 협상할 것, 그리고 저작권법이 발효 후 납부했어야 하는 사용료 소급적용 명령
 - ▶ 구글은 협상을 진행하면서 항소
- ▶ 2020년 10월, 프랑스 법원은 구글 항소 기각. 콘텐츠 이용료에 대해 저작권자와 협상하도록 명령
- ▶ 2021.1.21. 구글, 프랑스 언론 단체와 출판사 별로 사용료 지불에 대한 협상 틀을 확정했다고 발표.
 - ▶ 2021.2.14. 구글, 프랑스 언론매체 연합인 APIG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로 3년간 7600만 달러(약 840억원) 지불 합의.
 - ▶ 구글 뉴스쇼케이스에 기사 제공 조건으로 1000만 달러(약 113억원) 추가
 - ▶ APIG 이외의 다른 단체에 소속된 언론사들과의 협상은 회피. 정치 및 종합정보 제공 신문사 외의 엔터테인먼트 등 전문 언론과는 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입장

프랑스

- ▶ 2021.7. 프랑스 경쟁당국,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5억 유로(한화 약 6,800억 원) 과징금 부과.
- ▶ 2020년 4월 경쟁당국의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 ▶ 객관, 투명, 차별없는 협상 의무 위반 : 종합언론사 외 언론사 및 통신사 차별.
 - ▶ 사용료 평가를 위한 정보제공 의무 위반
 - ▶ 구글은 검색에 노출되는 콘텐츠보다 뉴스쇼케이스 중심으로 논의
 - ▶ 독립성 위반 : 다른 서비스를 대상으로 언론사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협상 진행
- ▶ 구글은 항소, 동시에 구글의 약속을 경쟁당국에 제출
 - ▶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협상
 - ▶ 언론사의 선택 존중:협상이 뉴스콘텐츠의 노출, 색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독립적 중재자의 개입 존중: 중재 절차와 약속의 적절한 실행을 모니터링할 대리인의 임명 제안

프랑스

- ▶ 2021.10.21. APIG는 페이스북과 뉴스 콘텐츠 노출 및 사용료 관련 일반 원칙에 합의. 페이스북은 2022년 1월부터 페이스북 뉴스 전용 공간인 '페이스북 뉴스'의 프랑스어 버전을 출시할 계획임을 발표.
- ▶ 2021.10.26. 협상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위해 DVP(언론 저작권접권 협회) 설립.
- ▶ 2021.11.17. 구글, AFP 뉴스콘텐츠의 저작권접권 보상 합의 발표.
- ▶ 2022.1.10. SEPM(프랑스 매거진 출판사 노조), 경쟁당국에 구글 제소 발표. 모든 종류의 뉴스콘텐츠에 사용료 지불 촉구.

독일


- ▶ 2021.5.20. 저작권법 개혁안(저작권서비스제공자법) 통과. 2021.8.1 시행.
- ▶ 2021.11. 구글은 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 디차이트(Die Zeit), 경제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 및 베를린 타게스슈피겔(Berlin Tagesspiegel)을 포함한 몇몇 언론사와 첫번째 계약 체결.
- ▶ 2021.10. 독일 저작권료 징수단체 중 하나인 코린트미디어(Corint Media)는 구글과 협상에 돌입. 이 회사는 구글과의 2022년 저작인접권 협상에서 뉴스사용료로 4억 2000만 유로를 요구하였으나 결렬됨. 2021년 12월,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에서 활용될 2022년 뉴스콘텐츠 사용료로 1억 9천만 유로를 요구함.

스페인

NEWS

Google News is now available in Spain

Jun 22, 2022 · 2 min read

 Fuencisla Clemares
VP Iberia, Google

 Share

- ▶ 2014.10.28. 스페인 의회는 구글뉴스에 링크와 스니펫을 노출하는 대가로 저작권료를 내도록 하는 법 통과.
 - ▶ 신문 등 저작권 관리 기관인 스페인 저작권보호센터(CEDRO)가 구글과의 협상에 나서며, 만약 뉴스 사용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적 재산권 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 ▶ 2015.1.1 발효. 그러나 구글은 뉴스 서비스 중단.
- ▶ 2021.11.2. 지적재산권법에 새로운 조항 도입.
 - ▶ 뉴스 저작인접권의 집단 관리 의무를 공식화하지 않으며 언론사와 저자가 콘텐츠의 출판 및 사용료와 관련된 협상을 단독 또는 집단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을 남겨둠. 플랫폼 사업자에게 선의와 투명성의 조건 하에 협상을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며,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 ▶ 2021.11.3. 구글은 스페인에서 구글 뉴스서비스 재개할 것이라 발표. (구글은 개별 협상 없이 언론계 전체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이탈리아

- ▶ 2021.12.12. EU 저작권 지침을 반영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효.
- ▶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신규제기관인 AGCOM이 뉴스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함.
- ▶ 협상 개시 요청 후 30일 이내에 보상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론사가 해당 문제를 AGCOM에 회부 가능.
- ▶ 뉴스 사용료 제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AGCOM이 일방적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지불해야 할 보상금 결정 가능
- ▶ 플랫폼 사업자는 언론출판사 또는 AGCOM의 요청에 따라 공정한 보상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 ▶ 언론출판사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이 데이터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AGCOM은 지난 회계 연도 매출의 최대 1%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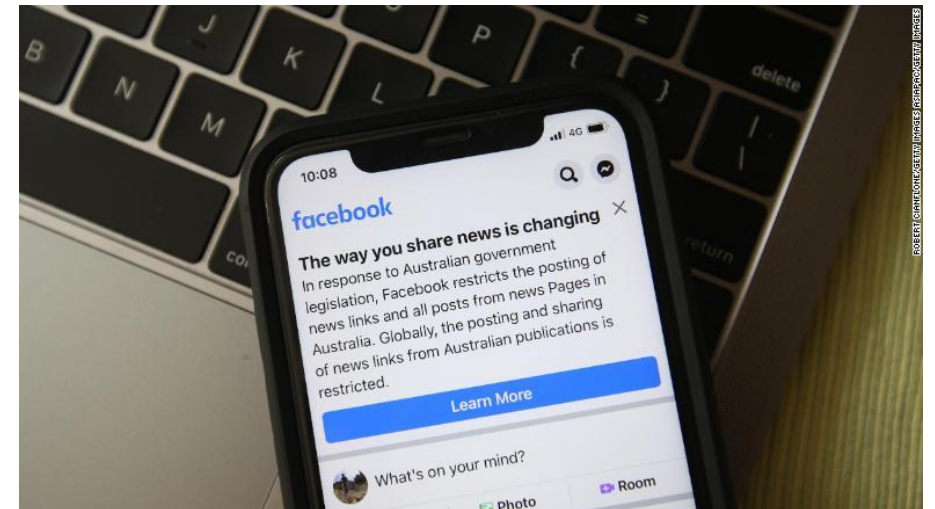
저작인접권 기반 모델 쟁점

- ▶ 링크와 스니펫은 공정이용 영역
 - ▶ 권리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음
 - ▶ EU 저작권 지침의 경우,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는 발췌문의 길이 모호
- ▶ 빅테크 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 및 이용자에 영향
- ▶ 언론사의 수익 감소가 빅테크 플랫폼에서의 저작물 이용 때문인지 근거 부족
 - ▶ 구글의 경우 플랫폼에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
 - ▶ 구글 검색에서 제외될 경우 오히려 언론사 수익 감소
- ▶ 플랫폼과 언론사의 협상 기반의 접근법은 언론사 통합 촉진, 소규모 언론사 배제
- ▶ 언론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 확대

호주

개요 및 경과

- ▶ 뉴스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의 의무 협상법
(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
 - ▶ 뉴스 미디어의 경쟁법으로의 보호
- ▶ 경과
 - ▶ 2019.7, 호주 경쟁당국인 ACCC, <디지털 플랫폼 연구(Digital platforms inquiry)> 보고서 발표
 - ▶ 2020.4 호주정부는 ACCC에 code 입안 지시.
 - ▶ 2020.7 초안. 2020.12 발의
 - ▶ 2021.2 구글은 언론사들과 협상 타결.
 - ▶ 2021.2.17 페이스북, 호주 뉴스 차단. 2.22에 결국 협상 타결.
 - ▶ 2021.2.24 법안 통과



(출처 : CNN, Facebook bans news in Australia as fight with government escalates, 2021.2.19)

주요 내용

- ▶ 목적 : 호주 뉴스 미디어 조직과 주요 디지털 플랫폼 간의 협상력의 근본적인 불균형 해결 모색
- ▶ 디지털 플랫폼과 언론사가 비용 지불에 대한 협상을 하도록 하고, 합의에 실패하면 독립적 중재자가 결정
 - ▶ 법안 통과 3개월 내 당사자 간 사용료 협상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호주 뉴스 미디어 산업에서 활용되는 최저 산업 표준에 따라 강제조정
- ▶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불 대상 : 페이스북 및 구글을 타겟
- ▶ 언론사는 통신미디어청(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을 통해 자사 뉴스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위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 등록된 언론사는 이용료 지불을 요구할 뉴스 소스를 지정해야 함.
- ▶ 플랫폼이 뉴스 노출 알고리즘을 변경할 때 언론사에 고지하도록 함.
- ▶ 뉴스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뉴스콘텐츠를 “중요한 뉴스(Core News)”로 국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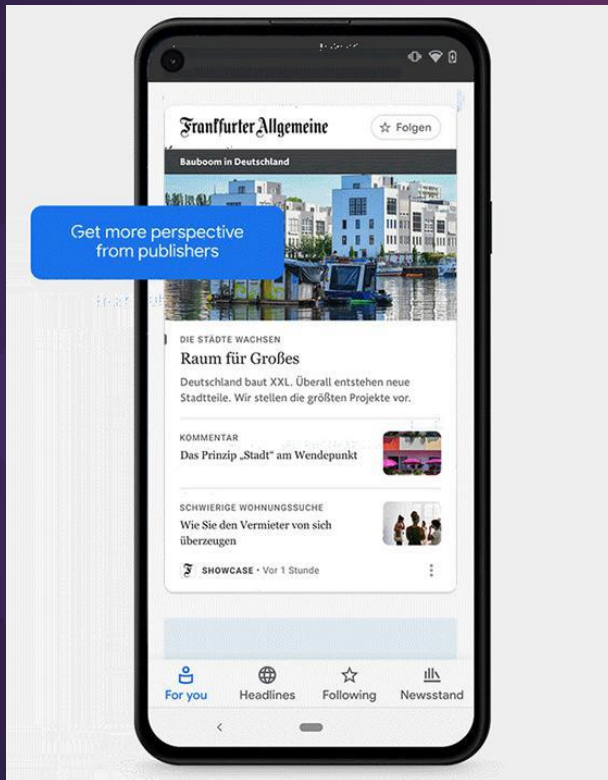
수정안

- ▶ 중재 조항의 완화 :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두 당사자는 각자의 제안서를 독립 중재 기관에 제출. 독립 중재 기관이 합의를 위한 하나의 제안 선택.
- ▶ 강제 조항을 적용하기 이전에 해당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사와 이미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불과 관련된 합의를 이뤘는지 고려하도록 함.
 - ▶ 뉴스사용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뉴스미디어 협상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음 → 법 통과이후 현재까지 재무부는 본 규정에 따라 참여할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지명하지 않음
- ▶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와의 상업적인 협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인 사용료 지불 협상으로 인한 벌금 배제.

디지털 플랫폼과 언론사의 협상

- ▶ 2021.2 구글, 호주 최대 뉴스미디어 기업인 세븐웨스트미디어, 나인 엔터테인먼트, 뉴스코퍼레이션(호주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의 소속 언론사 포함)과 뉴스 사용료 지불에 합의
- ▶ 2021.3.15 페이스북, 뉴스코퍼레이션 소속 언론사들과 뉴스 사용료 계약 체결 발표
- ▶ 2021.11. 18개의 호주 소규모 언론사가 '공익 언론사 연합(Public Interest Publishers Alliance)'을 결성하여 공동협상 중.

구글의 행보



- ▶ 2020.10 뉴스 쇼케이스라는 온라인 뉴스 환경 출시
 - ▶ 글로벌 콘텐츠 라이선스 프로그램으로 참여 언론사에게 자금 지원
 - ▶ 언론사는 구글 뉴스 상품에 표시되는 뉴스를 개성있는 방식으로 편집
- ▶ 2021. 프랑스, 호주, 독일 등 각 국의 주요 언론사와 사용료 계약 체결
 - ▶ 뉴스 쇼케이스 중심
- ▶ 2022.5. Extended News Preview (ENP) 프로그램 발표
 - ▶ 유럽 저작권 지침 제15조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Google의 이니셔티브
 - ▶ 스니펫, 썸네일 등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미리보기 콘텐츠를 라이선스 요금을 지불하고 표시하기 위해, 뉴스 웹사이트에 ENP 계약 제안.
 - ▶ 뉴스 웹사이트 소유자는 Google과의 ENP 계약 체결 여부 결정할 수 있음.
 - ▶ ENP에 참여하지 않는 사이트도 Google 검색 및 기타 제품에 계속 표시
 - ▶ ENP 라이선스는 제15조를 국내법에 반영한 국가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매체에 부여(유럽연합 국가에만 적용)

캐나다

캐나다

- ▶ 2021.2.17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 캐나다 상원의원 클로드 카리냥(Claude Carignan),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에 콘텐츠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 발의.
 - ▶ 주요 내용
 - ▶ 언론사는 정부가 지정한 디지털 플랫폼 업체와 공동으로 뉴스사용료 협상
 - ▶ 뉴스사용료는 언론사에 지불되고 각 언론사가 이를 분배.
 - ▶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디지털 플랫폼이나 언론 기관은 저작권위원회에 항소 가능
 - ▶ 보상 대상 : 저널리즘 저작물 또는 그에 상당한 콘텐츠
- ▶ 2022.4.5. 캐나다 파블로 로드리게즈 문화부 장관은 트뤼도 정부가 발의한 '온라인뉴스법'의 세부 내용 공개
 - ▶ 호주 법안과 유사 :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언론사와 협상하여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함.
 - ▶ 언론사는 독자적으로, 혹은 연합하여 협상 가능
 - ▶ 자율적인 협상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캐나다 방송·통신 규제 당국이 강제 조정 절차 개시

호주 모델 쟁점

- ▶ 협상 기반의 접근법은 대규모 언론사에 유리
 - ▶ 구글도 보상 기준에 "정치 및 일반 정보에 대한 발행인의 기여도, 발행물의 일일 발행량, 월간 인터넷 트래픽"이 포함된다고 명시 -
→ 대규모 언론사에 유리
 - ▶ 소규모 언론사들은 반대 입장
- ▶ 저작권 모델과 마찬가지로 플랫폼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전제
- ▶ 실효성의 문제
 - ▶ 호주의 뉴스미디어협상법을 우회하여 거대 플랫폼과 대규모 언론사 간의 협상 체결
 - ▶ 플랫폼과 언론사 간의 협상내용은 비밀로 유지

미국

경과

- ▶ 2020.10.6. 미 하원 사법위원회 반독점, 상업 및 행정법 소위원회, 다수 스태프 보고서 및 권고안 <디지털 시장의 경쟁 조사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
 - ▶ 퍼블리셔와 방송사가 구글과 페이스북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과 뉴스 퍼블리셔 사이에 "교섭력의 상당한 불균형"이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은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소스의 품질과 가용성을 저해한다고 평가.
 - ▶ 소위원회 위원장 David Cicilline 의 법안(2019년 발의된 저널리즘 경쟁 및 보존법) 고려 권고
- ▶ 2021.3. S.673 : 2021년 저널리즘 경쟁 및 보존법(The Journalism Competition and Preservation Act of 2021, JCPA)이 하원과 상원에서 재발의.
 - ▶ 초당적 지지 : 민주당 상원의원 Amy Klobuchar 발의, 3명의 민주당, 4명의 공화당 의원 후원
 - ▶ 하원에 발의된 HR1735는 23명의 민주당, 12명 공화당 의원이 후원



2021년 저널리즘 경쟁 및 보존법의 내용

- ▶ 2019년 버전과 유사, 디지털 및 인쇄 출판사에 더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뉴스 매체 포함.
- ▶ 뉴스 콘텐츠 제작자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온라인 콘텐츠 배포자"와 콘텐츠 배포 조건과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독점 금지법에 대한 면제(4년) 부여
- ▶ 온라인 콘텐츠 배포자: 뉴스 기사를 표시, 배포 또는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월간 활성 사용자가 10억 명 이상인 회사. → 구글과 페이스북
- ▶ 뉴스 콘텐츠 제작자: 다음과 같은 인쇄, 방송 또는 디지털 뉴스 조직
 - ▶ 최소한 매주 발행
 - ▶ 전담 편집 직원이 포함
 - ▶ 구독, 광고 또는 후원을 통해 마케팅
 - ▶ 콘텐츠의 25% 이상이 독창적인 뉴스 혹은 콘텐츠
- ▶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뉴스 퍼블리셔의 집단적인 협력 허용
 - ▶ (1) 뉴스의 품질, 정확성, 저작자 표시 또는 브랜딩, 상호 운용성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 ▶ (2) 소수의 발행인이 아닌 전체 업계에 이익이 되고 다른 뉴스 발행인을 차별하지 않으며,
 - ▶ (3) 이러한 협상과 직접 관련되고 이러한 협상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JCPA에 대한 Public Knowledge 의 비판

- ▶ 미디어에서 기존 권력관계 심화
 - ▶ 규모가 협상의 주요 수단이므로 뉴스 산업의 통합 촉진
 - 뉴스 미디어 카르텔 허용보다 플랫폼의 게이트키퍼 권한 통제 필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경쟁 촉진, 독점금지법 개선, 연방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
- ▶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성에 부정적 영향
 - ▶ 링크와 스니펫은 공정이용,
 - ▶ 플랫폼과의 협상이 링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 ▶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지 모호함 : 이러한 권리를 부여한다면 이는 저작권 이상의 새로운 독점권을 형성
 - JCPA가 링크와 스니펫으로 저작권을 확대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할 필요

JCPA에 대한 Public Knowledge 의 비판

▶ 저널리즘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

- ▶ JCPA는 협상을 통해 획득한 자금이 언론인 고용을 위해 사용될 것에 대한 요구조건이 없음. 언론사가 금융 거래, 주주 보상 등에 오용할 가능성.
- ▶ 플랫폼 의존도 심화, 빅테크에 대한 비판적 저널리즘 약화 우려
- 협상을 통해 얻은 자금의 허용 가능한 범위를 법에 포함.
- 공동체 소유, 비영리, 자선 활동 등 비상업적 비즈니스 모델 포함

▶ 기사에 대한 진정한 가치 보상의 한계

- ▶ 뉴스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언론사와 플랫폼 간의 근본적인 견해 차이 존재
- ▶ 저널리즘은 중요한 공공재이며 재화 제공의 시장 실패 발생
- 경제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시장 실패에 대한 플랫폼의 공적 의무 부여 필요

▶ 실제 행동에 대한 감시와 결과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

- 법안에 보고 요건을 포함 : 법안의 영향에 대한 평가, 자금이 뉴스 콘텐츠 제작에 투자되었다는 증거 요구.

인터넷을 위한

Superfund 제안

- ▶ Public Knowledge의 제안
- ▶ 목표 :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지역 언론 의 위기 해결
- ▶ 디지털 플랫폼 : 팩트체킹과 같은 뉴스 분석 서비스 사용, 이에 대한 기금 형성에 기여
 - ▶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재량에 맡기는 것은 한계
 - ▶ (미국에 기반하고, 최소 10억 명 글로벌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에 월간 활성 사용자의 총수에 기반한 수수료 부과 → 페이스북 (27억), 유튜브 (20억), 인스타그램 (11억)
 - ▶ 월간 활성 사용자는 금융 커뮤니티에서 플랫폼 간의 성장과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측정값이므로 조작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기성 계정을 정리할 인센티브 제공
- ▶ 자격을 갖춘 뉴스 조직 : 뉴스 분석 서비스의 개발 및 공급
- ▶ 기금의 관리 : 콘텐츠에 관여하지 않는 독립 기구에서 신탁기금 관리

Free Press Action Fund의 입장과 제안

- ▶ 미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상업 및 행정법 소위원회의 청문회에 제출한 자유언론행동기금(Free Press Action Fund)의 진술서
- ▶ 빅 테크와 빅 미디어의 이익을 위한 증오 및 거짓말 비즈니스 모델은 모두 민주주의에 해롭다.
- ▶ 기업 미디어는 양질의 뉴스와 정보에 대한 공익에 기여한 적이 없다.
 - ▶ 저널리즘을 회복하기 위해 기업 미디어를 지원하는 정책에 반대
 - ▶ 정책은 소외된 지역과 뉴스 사막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해야
- ▶ 저널리즘은 지원이 필요한 공공재이지만 방송사는 여전히 번성하고 있다.
 - ▶ 인터넷 사용 증가 자체가 신문광고 쇠퇴의 이유이며, 소셜 미디어 거물과의 불평등한 협상력의 결과가 아님을 시사
- ▶ 경쟁 정책, 규제 및 새로운 종류의 대중 매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 ▶ 미디어와 기술 분야 모두에 이어서 독점 금지와 경쟁 정책 필요
 - ▶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안 제정 및 차별적 알고리즘의 규제
 - ▶ 빅테크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자금을 지역 비영리 언론에 재분배

참고자료

- ▶ 계승균, 유럽연합에 있어서 온라인 이용과 관련된 언론출판물 보호, 2019 저작권 학술대회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의 쟁점 및 시사점> 자료집 (2019.6.21)
- ▶ 진민정, 디지털 플랫폼 뉴스사용료를 둘러싼 규제 쟁점과 현황- 프랑스와 호주를 중심으로, 미디어정책 리포트 2020년 5호, 2020.9.
- ▶ 진민정, 디지털 플랫폼 뉴스사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규제 쟁점과 현황 II, 미디어 정책 리포트 2021년 2호, 2021.3.
- ▶ 진민정, 디지털 플랫폼 뉴스사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규제 쟁점과 현황III, 미디어 정책 리포트 2022년 1호, 2022.3
-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프랑스 경쟁당국, 구글의 뉴스 재사용에 대한 사용료 지불을 명령. 지식재산동향뉴스 2020-17.18 권호
- ▶ 녹색경제신문, "캐나다, 페이스북과 구글에 뉴스 사용료 강제 ... 한국도 도입할까?", 2022.4.6.
- ▶ 매일경제, "佛, '언론사와 협상 불성실' 구글에 6천784억원 과징금 부과", 2021.7.13.
- ▶ 연합뉴스, "'뉴스 사용료 분쟁' 구글, 5억유로 과징금 佛공정위에 이의제기", 2021.9.2
- ▶ Tech Recipe, "구글, 佛 언론에 뉴스 게재료 지불 동의했다", 2021.1.25

참고자료

- ▶ ACCC, Digital platforms inquiry Final Report, 2019.7.
- ▶ Google, The Alliance de la Presse d'Information Générale and Google France announce an agreement relating to the use of online press publications, 2021.1.21
- ▶ Google, Google's approach to Europe's Copyright Law, 2021.11.1.
- ▶ Google, Google licenses content from news publishers under the EU Copyright Directive, 2022.5.11
- ▶ Harold Feld, America Needs a Public Interest Approach To Solving Big Tech Harms To News, 2021.2.9.
- ▶ Kamil Franek, How Google News Makes Money: Business Model Explained, 2019.12.17. <https://www.kamilfranek.com/how-google-news-makes-money/>
- ▶ Lisa Macpherson, Can the Journalism Competition & Preservation Act Really Preserve Local Journalism? Public Knowledge Says "Probably Not.", 2021.6.17.
- ▶ Lisa Macpherson, A Superfund for the Internet Could Clean Up Our Polluted Information Ecosystem, 2020.12.23.
- ▶ OECD, Competition issues in 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 ▶ Written Statement for the record of Jessica J.Gonzalez, Co-CEO, Craig Aaron, Co-CEO, S.Derek Turner, Research Director, Free Press Action Fund. 2021.3.12.

감사합니다.